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의안번호 : 제3236호
- 나. 제안자 : 문성호 의원 외 26명
- 다. 제안일 : 2025년 10월 20일
- 라. 회부일 : 2025년 10월 23일

2. 주문

- 캄보디아 정부에 공식적으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해 강력항의할 것을 건의함
- SNS 및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 등지에서의 납치 유도 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단속 특별 수사 기구 설치를 건의함
- ‘직접 경찰에 연락해라’, ‘오픈 전 이니 나중에 와라’식으로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한 해당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에 대해 직무 해제 할 것을 건의함

3. 제안이유

- 2023년 6월 6일, 인터넷방송인 변아영 씨가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칸달성의 한 연못가에서 전통 돛자리에 싸여 사망한 채로 발견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은 지 2년 뒤,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된 여성이 극적으로 박찬대 국회의원실로의 연락에 성공하여 캄보디아 캄퐁주 보코산에서 구출되는데, 현장에는 무려 13명의 한국인이 감금된 상태로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함

- 한 청년은 캄보디아에 은행 통장을 팔면 고액을 벌 수 있다는 꿈에 넘어가 캄보디아로 넘어갔으나 곧바로 납치 감금당한 후 마약 강제 투여까지 당했으며, 지난 8월 범죄조직의 아지트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가 하면, 마찬가지로 자영업을 하던 40대 남성도 은행 통장 매매 사기에 넘어가 캄보디아에 방문했다가 납치당하는 사건도 발생함
- 다행히 자영업을 하던 40대 남성은 비밀로 숨겨두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구조를 요청했으나, 대사관측은 “현지 경찰에 직접 신고하라”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놓았으며, 해당 남성은 이에 낙심하지 않고 건물 6층에서 4층 발코니로 뛰어내린 후 도망쳐 직접 목숨을 걸고 대사관을 찾아감. 하지만 대사관 측은 “근무 시간이 아니니 근무가 시작된 뒤 방문하라”라는 더욱 황당무계한 답변을 내놓고, 해당 남성은 살고자 하는 절실히 쓰레기 더미에 몸을 숨겨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실이 전해져 온 국민이 충격을 금하지 못하고 있음
- 베트남 축구의 전설 박항서 감독 역시 캄보디아를 방문했다가 택시를 활용한 한국인 납치를 당한 적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지면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표적으로 한 사기, 납치, 감금, 고문, 범죄연류 강요 등 심각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에 공식적으로 이러한 범죄에 대한 강력

항의를 전함과 이러한 범죄 수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목적의 모니터링 및 특별수사기구의 설치, 국민의 생명을 등한시한 해당 대사관 직원의 직무 해제를 건의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등

5. 이송처

○ 대한민국 정부 / 대한민국 외교부 / 대한민국 국회

6. 검토 의견

가. 개요

- 이번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표적으로 한 납치, 감금, 사기 등 심각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것으로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공식 항의, SNS와 온라인 등을 통한 납치 유도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특별 수사 기구 설치, 그리고 국민의 구조 요청에 부적절하게 대응 한 대사관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임

나. 피해 현황 및 실태

-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관련 신고 건수는 '21년 4건, '22년 1건에 불과하였으나 '23년 17건, '24년 220건, '25년 8월 기준 330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21~'22년의 낮은 신고 건수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제 이동 제한의 영향으로 판단됨
- '24년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0배 이상 폭증 하였고 '25년 10월 기준 100건 이상의 사건이 미해결 상태이며, 100명 이상의 한국인이 여전히 행방불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최근 5년간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 감금 신고 건수〉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8월)	비고
신고건수	4	1	17	220	330	
증가율	-	-75 %	1,600 %	1,194 %	50 %	

출처 : 2025.10.2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캄보디아·주베트남·주태국·주라오스대사관 국정감사, 캄보디아 프놈펜

-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은 SNS, 구인구직 사이트, 해외 교민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고액 알바’, ‘해외 취업’, ‘IT 업무’, ‘통장 매매’ 같은 키워드를 미끼로 한국인을 유인하고 있으며 캄보디아에 입국한 피해자들은 여권을 압수당하고 ‘웬치(Wenci)’라 불리는 범죄단지에 감금되어 하루 12시간 이상 강제노동, 범죄활동에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자발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한국인도 상당수 존재하며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단지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은 1,000~2,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¹⁾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가 ’23.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최소 10만 명이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강제 동원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사기 피해액이 연간 180~37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최근 납치 피해자가 탈출에 성공하여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현지 경찰에 직접 신고하라”, “근무 시간이 아니니 근무가 시작된 뒤 방문하라”고 대응하는 등 영사조력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한국인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교당국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1) 국정원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한국인 1~2천명 가담”, 2025년 10월, 국회 정보위원회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87591&ref=A>)

다. 정부의 대응 현황

- 정부는 '25년 10월 주한캄보디아대사 초치 및 프놈펜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을 시작으로 아세안 정상회의²⁾에서 한국-캄보디아 정상회담을 통해 범죄 근절을 위한 최고위급 합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11월 '코리아 전담반'이 공식 출범하여 24시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음
- 또한 범죄 연루 개인·단체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³⁾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음. 최근 양국 공조로 상황이 일부 개선됨에 따라 프놈펜 등의 여행경보는 하향 조정(12월 4일)되었으나 우범 지역에 대한 제재는 유지 중임
- 경찰청은 캄보디아 현지에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을 파견하여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대다수를 구속하는 등 형사 절차를 진행 중이며⁴⁾ 특히 양국 경찰청 간 MOU 체결(11월 10일)로 출범한 '코리아 전담반'을 통해 신고·구조·송환의 원스톱 대응 체계를 마련했음. 아울러 법무부는 범죄수익 환수 및 적색수배를 위한 관련기관 협동 TF를 운영하며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강화하고 있음
- 주캄보디아 대사관은 납치 피해 국민의 구조 요청에 대한 응대 거부,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 실패 등 초기 대응 부실 의혹이 제기되어 비판 받고 있으며 이에 외교부는 당직 체계 개편, 매뉴얼 정비 등 영사조력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으나 부실 대응 관련자에 대한 문책 요구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2) 제47차 아세안(ASEAN) 정상회의, 2025년 10월 26일 ~ 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개최
주요 참석 국가 : 아세안 회원 11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장국),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동티모르), 동북아 3국 (한국, 중국, 일본), 기타 (미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브라질 등)

3) [보도자료] 정부, 스캠사기 등 동남아 온라인 조직범죄 첫 독자 제재, 2025.11.27. 외교부

4)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64명 송환...수갑 채워 경찰 압송, 2025.10.18. 연합뉴스

라. 건의안의 시의성과 타당성

- 이번 건의안은 '25년 10월 20일 발의되었으며, 이는 정부가 합동대응단을 파견(10월 15일)하고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10월 15일)한 직후로서, 정부 대응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음
- 코리아 전담반 출범(11월 14일), 독자 제재 발표(11월 26일) 등 정부 차원의 후속 대응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 대응은 이번 건의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겠음. 그럼에도 현재 100명 이상의 한국인이 행방불명 상태이며 캄보디아 보코산 등 주요 범죄단지 지역에는 여행금지(4단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스캠 범죄 연루 피해 신고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이번 건의안의 시의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됨
- 또한, 서울시민이 해당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 우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중앙정부에 정책적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건의안은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부합하며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마. 건의안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1)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공식적·강력한 외교적 항의 건의

캄보디아 정부에 공식적으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해 강력항의할 것을 건의함

- 이번 건의안은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대상 납치·감

금·강제노동 등 중대 범죄에 대하여 캄보디아 정부에 공식적이고 강력한 외교적 항의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캄보디아 내 범죄단지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범죄는 단순한 개별 범죄가 아니라 현지 권력층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조직적·구조적 범죄라는 점에서 캄보디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단속과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외교적 항의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음
- 정부는 건의안 발의 전후로 대사 초치, 정상회담 개최, 독자 제재 발표 등 외교적인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100명 이상의 한국인이 행방불명 상태이고 경찰 공조 요청 회신율이 약 30% 수준에 그치는 등 캄보디아 당국의 협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외교적 항의와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할 것임

(2) 온라인 모니터링 및 특별 수사 기구 설치 건의

SNS 및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 등지에서의 납치 유도 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단속 특별 수사 기구 설치를 건의함

- 이번 건의안은 SNS 및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서 이루어지는 납치 유도 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단속 특별 수사 기구의 설치를 촉구하고 있음
- 캄보디아 범죄단지 관련 피해자 대부분은 온라인·SNS상에서 ‘고수익 알바’, ‘고액 해외취업’ 등을 내세운 허위 채용 공고를 통해 유인되고 있으며 외교부는 이러한 온라인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 항공료 선지급 제안 등이 전형적인 스캠 모집 패턴이라고 밝힌 바 있어 온라인 모니터링 및 사전 차단이 중요한 설정임

- '25년 10월 대통령이 동남아 전체에서 한국인 대상 불법 구인광고 삭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경찰청·플랫폼 사업자(네이버·카카오·구글 등)가 참여하는 합동 TF 구성을 지시하였다는 점에서 서울시의회 차원의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요구와 특별수사기구 설치를 건의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주캄보디아 대사관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 건의

“직접 경찰에 연락해라”, “오픈 전 이니 나중에 와라” 식으로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한 해당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에 대해 직무 해제할 것을 건의함

- 이번 건의안은 “직접 경찰에 연락해라”, “오픈 전이니 나중에 와라” 등 의 대응으로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한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에 대해 직무를 해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부실 대응에 대해 국민 청원과 국회 차원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감찰·징계 등 인사 조치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며 재외 국민 보호는 대사관의 핵심 임무인 만큼 영사조력 체계의 개선과 함께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건의안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 외교부는 부실 대응 의혹에 대해 캄보디아 경찰의 ‘본인 직접 신고’ 방침에 따른 것이라 해명하고 긴급 영사조력이 가능하도록 당직 및 비상 연락 체계 개선과 영사 인력을 증원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⁵⁾ 특정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으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5) [보도자료]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에 대한 외교부·주캄보디아대사관 대응 노력 관련, 2025.10.11. 외교부

7. 종합 의견

- 이번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은 캄보디아 내 범죄단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강제노동 등 중대 범죄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100명 이상의 한국인이 행방불명 상태에 있고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건의안의 시의성과 필요성이 인정됨
- 이번 건의안에서 촉구하고 있는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공식적 강력 항의(주문 1)와 관련하여 정부는 대사 초치, 정상회담, 독자 제재 등 외교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모니터링 및 특별 수사 기구 설치(주문 2)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불법 구인광고 삭제 지시와 관계 기관 합동 TF 구성 등이 추진되고 있어 건의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아직 미해결된 사건과 피해자가 남아 있고 범죄조직이 단속을 피해 근거지를 이동하고 있으며 유사한 범죄를 통해 청년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이번 건의안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 주캄보디아 대사관 직원에 대한 직무 해제(주문 3)는 재외국민 보호라는 대사관의 핵심 임무에 비추어 책임 소재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나 인사 조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